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임금은 낮게
임금은 낮게
연금·공공서비스
누더기

박근혜가 기업주에게 주는 신년 종합선물세트

관련 기사 2~4면

그리스
노동자 투쟁과
시리자 정부 등장 임박

12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드겠습니다"

4면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3면

SNS는
"청년들의 아편"인가?

6~7면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

3, 8~9면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는
개약을 위한 미끼다

5면

누구의 말일까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가 진보당 해산 선고 당일에 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에게 보낸 연하장

“이 방대한 자료들(16만 7천 페이지)을 헌법 재판관들은 제대로 봤을까요? 지난 13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매일 책 한 권 분량씩 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 재판관, 속독의 달인들인가 봅니다.”

노종면
현재의 '신속한' 진보당 해산 선고를 비꼬며

유창중: “사면위원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오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권영건: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무부 차관 황희철: “공개되면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외부 위원님들의 명단이 알려진다면 집중포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이건희 1인 사면'을 자행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몇몇하지 못한 짓을 하면서 이름 공개될까 봐 전전긍긍

“부부 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 국기배례를 하더라.”
박근혜가 영화 '국제시장'을 '강추' 한 이유

“프랑스는 이 순간부터 이슬람 근본주의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 사형제 부활을 국민투표에 부처자.”
프랑스 주간지 살레 사건 후 벌써부터 준동하는 프랑스 파시스트 정치인 마린 르펜

“영국에서만 6백 명의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를 여행하고 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이슬람국가(IS)와 관계가 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MI5 국장 앤드류 파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인터넷 감시와 사찰을 강화하려고

“학생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안 주는 악덕 업주,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설득해 나쁜 마음도 바꾸게 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
드라마 '미생' 보고 공감했다는 김무성의 충고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여전히 4대강 사업 자화자찬하는 이명박

“내가 뭘 잘못했나?”
대한항공 조현아의 사건 직후 항변
“반드시 복수하겠어.”
대한항공 조현아의 동생 조현민,
언니나 그 동생이나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박설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위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속에서 저성장의 고착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깊어졌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제물 삼아 시장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구상이다.

이번 정부 정책의 방향은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방안의 핵심은 첫째,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 지출을 효율화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을 필두로 사학·군인연금을 개악하고, 국민연금 운영과 건강보험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광범하고 신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한 민간 투자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임금 삭감 등의



비정규직 '보호' 없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장그래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원한다.

계획도 담았다.

특히 4~5월 국회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은 본격적인 공격의 첫 포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공적연금 전반을 수술하려 한다. 따라서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등 전체 노동자 운동 차원의 연대 투쟁 전선도 구축돼야 한다.

둘째,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다. 이는 ‘정규직의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로 요약된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급제 전환 등 임금체계를 개악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늘리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도록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비난하면서 위축시키려 한다. 그렇게 해서 전체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악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비난 논리에 맞서며 조건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공공기관·대기업 노조 간부들은 정부의 비난 때문에 투쟁보다는 국민적 지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논리는 자칫 당면 공격에 맞서 투쟁하기를 회피하거나 머뭇거리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진정 효과적으로 지지를 모으려면, 자신의 요구가 왜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지를 설득하며 단호히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철도 파업 때처럼 말이다. 또 자신이 가진 힘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해서도 적극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일부 공격은 법 개악

을 통해 관철하려 하지만, 일부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임금체계 개악이나 해고 요건 완화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을 손쉽게 해 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럴 때 노조들이 사업장 별로 각개약진 하지 않도록,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어떤 노조는 “올해 우리는 단체협약은 없고 임금협약만 있다”는 이유로, 또 어떤 노조는 “일단 다른 사업장의 추이를 보고 투쟁하겠다”는 식으로 각개 대응해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민주노총 투쟁적 지도부의 당선

노동운동이 얼마나 단호하게 제 힘을 발휘하느냐,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결을 꾀하느냐가 관건이다. 박근혜는 골통스럽고 흥측하고 집요하지만, 그렇다고 강력하지만은 않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진실규명 운동으로도, 철도 파업 등 노동자 투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임원 직선제에서 투쟁적인 지도부를 선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투쟁 열망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파가 됐다는 것을 뜻

한다. 이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의 정치적 복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때처럼 싸움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으니 말이다. 한상균 집행부가 이런 조합원들의 열망을 옮곧게 대변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강단 있게 투쟁을 조직하길 기대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근 박근혜의 대대적인 공격에 맞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조직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의 신임 집행부

록 탄력적 노동시간 운용을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중 임금 문제가 논란거리 중 하나다. 노동운동 내 일부는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이유로, 혹은 안정적 고용을 위한다는 논리로 정규직의 임금 방어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향평준화

그러나 정규직의 임금 투쟁은 정당하다. 이들이 효과적으로 싸워 승리한다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비정규직 양산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웠지만, 그나마 개선책으로 내놓은 대책들조차 강제력이 없거나 피조된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조점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55세 이상 고령자의 전 업종 파견 허용,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정부는 불법파견의 소지를 줄이려고 파견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정책은 단지 비정규직만의, 혹은 미조직·고령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제 확대 등은 정규직 일자리를 공격해 단시간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한다. 따라서 정규직이 적극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가진 고유의 힘을 사용해 실질적 파업으로 강력히 맞설 때, 박근혜의 질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 활동가들, 투사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도부의 투쟁 선언은 현장의 투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제 구현되기 어렵다. 또 지도부가 제대로 싸움을 이끌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다.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강동훈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잘 못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파견노동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까지 공격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올해 3월까지 노사정위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타협’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를 들러리로만 이용할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노동자들에게 성공 사례이기엔커녕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동시에 저임금과 불안정만 늘린 신자유주의적 개악일 뿐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2003년 하르츠 개혁으로 5년 만에 고용률(취업 인구 비율,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한다. 독일 고용률은 2003년 64.6퍼센트에서 2008년 70.2퍼센트로 급증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2003~08년 동안 증가한 일자리 중 대다수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였다. 이 때문에 독일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2000년 16.6퍼센트에서 2012년 22.1퍼센트로 증가했다.

저임금 노동의 확대로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꼴인 5백30만 명이 시간당 8.5유로(1만 1천 원)도 받지 못해 왔다.(독일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시급 8.5유로의 최저임금으로 주당 40시간을 일해 봐야 빈곤선을 겨우 넘는다.) 그래서 1995~2006년 사이 독일 노동자 하위 25퍼센트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13.7퍼센트 하락했고 하위 25~50퍼센트의 실질임금은 3.2퍼센트 하락했다.

하르츠 개혁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프랑스 등 주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임금 텅팡”으로 수출을 늘렸다고 비난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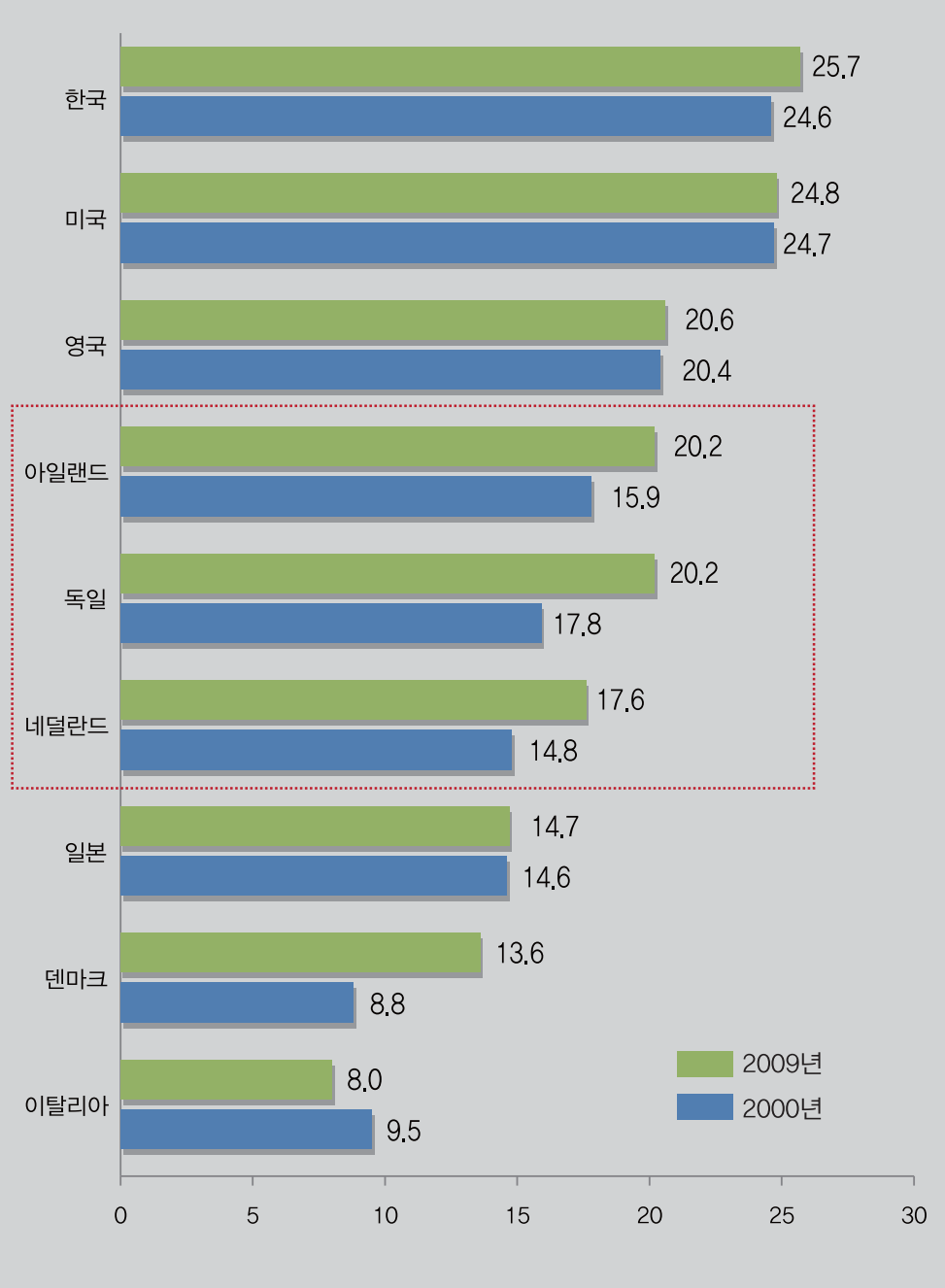
한편,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은 노사정 대타협의 대표적인 모델로 언급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업주들은 주당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이다.

“임금 텅팡”

1986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감축됐지만, 네덜란드 기업주들은 더 이상의 양보를 거부하고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오히려 네덜란드 기업주들은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경기가 살아나자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늘렸다. 1990~95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 60만 개 중 50만 개가 시간제였다. 즉,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노동의 폭증은 바세나르 협약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었다.

OECD 주요국 저임금 노동자 고용 비중



박근혜 정부의 홍보와 달리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기업주들은 정규직의 양보에

만족하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매진해 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때만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시간제 노동 비중(37.8퍼센트)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는 60퍼센트가 넘는다.

네덜란드 모델 지지자들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어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애초에 시간제 노동을 선호했던 것도 아니었다.

당시 네덜란드 여성들이 시간제를 받아들인 것은 공공 육아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여전히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보다 공공 보육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유명하다. 스웨덴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 비율이 20퍼센트에 그치는 것을 봐도 네덜란드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강요된’ 선택이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네덜란드나 독일의 사례는 정규직의 양보가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이면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말이다.

〈그림〉에서 보듯 2009년 독일과 네덜란드의 저임금 노동(중간임금의 3분의 2 이하) 비율은 각각 20.2퍼센트와 17.6퍼센트로 OECD 국가 중 한국(25.7퍼센트), 미국(24.8퍼센트), 영국(20.6퍼센트) 등과 함께 높은 축에 속했다. 이 수치는 모두 2000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는 계급 협력 정치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과도함을 비판했지만, 근본에서 맞서지 않았다. 이들은 “일자리 안정” 또는 여성·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며 정규직의 양보를 받아들이고 기업주나 정부와 협력하는 데 매달렸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정규직의 양보에 만족하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매진해 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때만 협상을 하고자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노사 협조주의적인 합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투쟁을 발전시켜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무슬림 혐오 시위대.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유럽에서 무슬림 혐오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파시스트들이 공세에 나선 시기에 일어났다.

프랑스에서는 나치 국민전선이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에 따른 이주민 희생양 삼기를 통해 권력을 넘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폐기다 운동이 무슬림과 이주민 반대를 내세워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영국에서도 특히 영국 독립당이 인종차별로 득을 보려 한다.

언론은 이번에 공격받은 〈샤를리 엡도〉를 평범한 “풍자 잡지”로 그린다. 그러나 그 잡지는 한때는 그랬었지만, 그동안 무슬림을 상대로 한 선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해 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이다.

또, 제국주의가 수년간 거듭거듭 중동 등지에서 전쟁을 벌이고, 암살·드론 공격·고문 등을 일삼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잔악무도한 행위들이 깊은 증오심을 만들어 낸 것이다.

무슬림을 상대로 한 전쟁을 마치 언론 자유를 위한 전쟁인 양 가장하는 것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은 모두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에 맞서 단결하자!

※ 이 글은 국제사회주의경향이 2015년 1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첫 직선 임원이 되셨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진 것 같고요.

이번 집행부는 이후 더 큰 단결을 이뤄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죠. 특히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체 노동운동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의 공세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후세에 큰 짐을 지을 거라 생각해요.

정부의 공격에 어떻게 맞설 계획인가요?

총파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요구는 각각 다르지만, 정부 종합대책의 파장을 고민하다 보면 큰 투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활동가대회 등 다방면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다 모인 자리에서, 왜 내가 공무원연금으로 싸워야 하는지, 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서울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소모적인 투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적의 아픈 데를 찔러야죠.

2015년 전체가 투쟁 시기가 될 것이죠. 2월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김민준 기자

떡위 비정규직 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국민적 우군을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힘만으로는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3~4월엔 법 개악 저지 투쟁 시기가 될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 있게 투쟁할 거고요. 전체 노동자들을 동일하게 묶어서 갈 거예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투쟁과 조기 임투를 연결시키고, 하반기에는 전체

노동자 의제로 박근혜와 맞짱을 뜨는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기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 태세도 갖춰야 해요.

최근 한 회의에서 쟁의권 위임 문제도 얘기하셨는데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죠. 저들이 도발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장의 요구를 받아 힘이 실릴 수 있게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투표를 거치는 위임이나, 지역별·산업별 선언을 통한 위임이나는 논의가 필요해요. 위임을 받고도 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있죠. 결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상집 논의를 거쳐서 대의원대회에 안을 제출할 것 같아요.

한국노총과의 공동 투쟁을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했어요. 노사정위에서 거친 합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노총이 최종 합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정부가 개악을 강행하면 공동투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면한 공무원연금 투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노조는 4월 투쟁이 잡혀 있어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전교조도 연가 투쟁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도, 같이 힘을 모으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대타협기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입장이 차이가 있죠. 결국 투쟁의 목표지점은 같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편차를 두고 힘이 모아질 거라고 봐요.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죠.

인터뷰·정리 박설

※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타협기구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했지만, 공무원노조·전교조 지도부와와의 만남 자리에선 비판적 입장을 제기했다고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조명지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1차 노동시장의 ‘과보호’를 완화해 벽을 허물어야만 부문 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져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정규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수년간 정규직의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노동시장 내 격차는 더 커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1차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은 1987년 노동자 투쟁의 성과였다. 1987년 이전에는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이 다 열악한 처지였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특히, 1987년 투쟁을 주도한 대공장, 대기업에서 그 성과가 현재

했다. 이는 자본가의 이해관계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 일이었다. 1980년대 후반 호황기에 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바랐고, 이를 위해 지불 능력이 있던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내복지 제공을 의사가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1차 노동시장 형성에 노조가 주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한국의 1차 노동시장은 임금과 승진 등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성과는 다른 부문의 조건도 끌어올렸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시작한 투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전체 세력관계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

정부와 기업들이 그토록 정규직 노조를 중요하고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IMF 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들은 정리해고제, 연봉제, 성과급, 승진제도 등을 통해 정규직 내부의 경쟁과 위계를 강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는 했지만, 한국 노동자 계급은 결정적 패배를 겪지 않았고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

운동의 주제

그러자 기업주들은 정규직 고용을 줄

이고 비정규직 고용, 외주화,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들이 져야 한다.

정부의 기만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에 눈감자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용 불안에 고통 받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또, 노동자들 사이에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단결은 더 어려울 것이다.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실업수당을 높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재취업 알선 등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보험, 연금, 교육 훈련,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다. 이것이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쇄할 수는 없다.

근본으로 이런 주장은 “기업의 생존이나 국제적 경쟁을 감안하면 고용유연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논리에 일관되게 맞서기 어렵고, 때로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요구가 과도하다”는 식의 태도로 이끌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웨덴식 연대임금을 대안으로 보

거나, 열악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이 사용자에 양보하자는 ‘사회연대전략’이 대표적 사례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를 분열시킨다는 점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나눔’ 때문에 자신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느낄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나누지 않는 정규직 때문에 임금이 적다고 탓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만 좋을 일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단결과 투쟁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로도 사용된다.

“떡고물”

한편, 정규직이 “자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통해 착취한 잉여분의 일부를 … 떡고물”로 받기 때문에 “자본에 포섭”됐고, 따라서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들이 새롭게 노동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마땅히 노동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쳐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면 커다란 문제를 낳는다.

무엇보다 정규직의 연대 여부가 비정

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큰 영향(때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이 후퇴하면 전반적 계급세력 관계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세가 형성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리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조를 불신하는 것은 노동조건 격차 그 자체보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에 충분히 연대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관료적 소심함과 보수성으로 진정한 연대를 회피해 온 노조 지도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경제 위기 시기에, 더구나 강경한 우파 정부 하에서 투쟁 없이(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몽상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이 단결과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조건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후퇴하지 않고 싸워야 하고 동시에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등)를 지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정치와 투쟁이 필요하다. 좌파는 노동자 계급 내 분열을 조장하는 온갖 이데올로기에 효과적으로 맞서야 하고,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최영준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교조 측이 끝까지 반대했는에도,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공노 사무처장, 공노총 위원장, 한국교총 회장, 한국노총 공대위원장이 공투본 몫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전교조 몫으로 거론되던 자리를 한국노총 공대위에 넘겼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대타협기구는 논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가 실질적인 합의기구여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조건부 참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여야 합의문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문구는 아무 구속력이 없다.



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무원노조 김성광 사무처장의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새정치연합은 불과 몇 달 전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기는커녕 반대로 유족을 거듭 배신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2007년 여당으로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개악한 장본인이자 2014년 기초연금 사기극에 합의해 준 공범이

었다.

그러므로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타협기구 내에서 개악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균형을 이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사실, 대타협기구 내 힘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기구가 합의기구가 되려면 공투본 지도자들이 양보한다는 뜻이다. 1월 8일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교총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공투본]가 양보할 수 있는 연금 개혁 수용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초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투본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보다 ‘구조 개혁’, ‘연금법 전면 개정’ 등 모호한 요구를 내놓으며 후퇴할 뒀문을 열어 줬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가 대타협기구 불참 입장을 밝힌 것은 옳았다. 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소속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대표자 회의 장소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불참을 호소하며 전교조 지도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라고 주장한 것도 옳았다.

일부 공무원노조 지도자들은 ‘전교조가 파업할 수 있냐’며 전교조 지도부에 우파적 압력을 가하는 듯하다. 관료적 타협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려는 압력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책임도 못 질 결정을 하지 말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따르라!’

만일 전교조 지도부가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동요와 후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기층에서 개악 저지 운동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기간(90일)을 못 박았다. 새누리당의 개악안에 대한 폭로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 단체들이 실시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 투표에서 90퍼센트 이상이 반대했다.

게다가 노조 지도자들이 타협 테이블에

블에 앉아 논의하느라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할 시간을 까먹을 우려가 크다. 이것이 진정한 위협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대화하자면서 무슨 투쟁이냐’며 노조 지도자들을 묶아매려 할 것이다.

지금은 타협 테이블에 앉아 ‘무엇은 되고, 무엇을 안 되고’ 식으로 저들과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시한을 정해 놓고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분명히 하고, 기층 조합원들의 투지를 고취시켜 나가야 할 때다. 특히 공무원노조 투사들은 공무원노조의 연금 개악 저지 운동이 이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박찬석(공무원노조 조합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새누리당은 국회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새정치연합과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지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그럴 듯한 ‘사기 진작’ 방안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주호영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인데 퇴직금과 보수를 올려 주면 의미가 없다”며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재정 중립적 정년 연장”이라는 꿈을 내놔다.

새누리당의 “재정 중립적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일부 공무원을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즉, ‘심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년 재계약해야 하고 임금을 매년 10퍼센트씩 낮추거나 퇴직 전 임금의 50퍼센트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려는 수작이다.

따라서 공투본이 최근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은 정년 연장과 연동돼야 한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 연금이 보장된다면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은 공적연금이 취약해 노인 인구 가운데 스스로 일해 먹고사



김영희

불필요하게 타협 말고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는 비율이 높은데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연금 개악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정년 연장을 고려할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15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마시즘 2015 MARXISM

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2015년 2월 6일(금)~8일(일)

장소 : 서울 | 주최 : 노동자연대

www.MARXISM.or.kr

02-2271-2395 | 010-4909-2026(문자 가능) | marxism@marxism.or.kr



SNS의 선용과 악용

장호중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는 2년 전 시작됐다. 이 글에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관련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피해호소인 A는 최근에 인터넷, 그것도 SNS(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폭로가 날을 효과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것이었다.

당시 정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일부 회원들은 온라인상의 낙인찍기가 낼 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SNS 상에서 논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A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당시로서는 아직 사건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했던 개인적 사실들을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만 키울 뿐이었다. 그 사례는 지금까지도 일부 지속되고 있다.

인간 관계 — 온라인과 현실의 차이

특별한 잘못이 아닌 사소한 정보들도 그것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게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예컨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나 연인에게 털어놓은 비밀이 어느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숨겨 온 것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한 사람이 지인들과 맺는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를 부모에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애정 표현을 누군가 엿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는가. 직장 상사에게 짹짹 매는 모습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점에서 최근 가장 유력한 인터넷

과 평판의 미래)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전엔 소문이 조그만 마을에서 서서히 퍼졌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정정이 가능했지만 인터넷은 달랐다. … 온라인으로 생판 모르는 남의 소식을 접하는 사람은 전후 맥락은 모른채 단편적 정보만 접한다. 개인적 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 불완전하고 모호한 진실은 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도 함께 읽어 보기를 권한다.

인터넷 낙인찍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 가을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SNS 관련 주요 이슈’를 다섯 가지 뽑았는데 다음과 같다. 자기표현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소통과 양극화, 정보 확산과 허위사실 유포, 정보 공유와 정보 과부하. 제목만 봐도 SNS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많아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주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이자 프라이버시법 분야의 권위자인 다니엘 솔로브는 자신의 책 〈인터넷 세상

유포되는 경우다. 이는 훗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인터넷 상에 퍼지고 나면 이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훗날 누군가 구글 검색창에 해당 사건이나 이름만 입력하면 굉장 가장 많은 조회를 거친 기록이 맨 위에 등장할 것이다.

가장 당혹스러운 일은 거짓말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주제일수록 빨리 넓게 퍼진다. 포털과 검색엔진은 이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아는 사람’들로 관계가 연결된 SNS의 경우 일정한 신뢰감이 더해져 쉽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저러 올린 정보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훗날 누군가 구글 검색창에 해당 사건이나 이름만 입력하면 굉장 가장 많은 조회를 거친 기록이 맨 위에 등장할 것이다.

다니엘 솔로브는 한국의 ‘개풍녀’ 사건을 언급하며 온라인 상에서 모욕 주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지적했다. ‘개풍녀’ 사건은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무분별한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을 곳곳에 퍼나르기 시작했고 곧이어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다니엘 솔로브는 비록 한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응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멀리 미국에 사는 자신이 알 정도면 이 사건은 마치



미국 정부는 기업 이윤과 인터넷 감시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당하는 일 없이 주는 벌금들을 제정했다.

별 생각 없이 SNS에 남기는 기록은 앞뒤 맥락 없는, 그러나 잘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

SNS — 인터넷의 자본주의적 진화

SNS는 영어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인데 국내에서는 이를 흔히 ‘사회관계망서비스’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SNS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사회관계망”을 “사교” 혹은 “교제”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SNS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도 “사회적 관계”보다는 “사교”에 가깝다.

굳이 용어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름만 보고 그 활용 가능성에 환상을 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SNS 상의 관계망은 “사회적”이지 않다. 연결된 링크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실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SNS에 중독돼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 13억 명 중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을 날마다 빠짐없이 체크한다. 미국 청년들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이나 된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1년 중 한 달 반을 페이스북을 보는 데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페이스북이 이토록 중독성을 보이는 까닭은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 즉 웹사이트,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보다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 듯하다.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는 광활한 가상 공간에서 나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묶어 주고 이들 사이에 오가는 정보를 “나”를 중심으로 재편해 보여 준다.(실제로는 그 정보들이 자기

가 고른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 친구들을 고른 기준이 자신의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대단한 정보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얻는 유대감은 너무 압박해서 실체가 있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지만 극도로 치열해진 경쟁에서 낙오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는 거짓 위로를 준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온라인 상의 접촉으로 손쉽게 대체하려는 바람이 생기게 된다. 이는 엄청난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 소모적 글쓰기로 이어진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기가 쓴 글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지 보느라 수십 분을 낭비한 경험을 토로하기도 한다. 별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누가 나에게 친구 신청을 하면 거절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예외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표현에 빗대 “인터넷과 SNS는 청년의 아편”이라고 꼬집었다.

페이스북이 이토록 중독성을 보이는 까닭은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 즉 웹사이트,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보다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 듯하다.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는 광활한 가상 공간에서 나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묶어 주고 이들 사이에 오가는 정보를 “나”를 중심으로 재편해 보여 준다.(실제로는 그 정보들이 자기

가 고른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 친구들을 고른 기준이 자신의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대단한 정보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얻는 유대감은 너무 압박해서 실체가 있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지만 극도로 치열해진 경쟁에서 낙오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는 거짓 위로를 준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온라인 상의 접촉으로 손쉽게 대체하려는 바람이 생기게 된다. 이는 엄청난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 소모적 글쓰기로 이어진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기가 쓴 글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지 보느라 수십 분을 낭비한 경험을 토로하기도 한다. 별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누가 나에게 친구 신청을 하면 거절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예외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SNS 제대로 이용하기

SNS의 ‘자기 중심적’ 특성들 때문에 이용자들은 개인주의의 늪에 빠지기 쉽다. 이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좌파적 청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권위주의를 혐오하고 아니키즘에 이끌리기 쉬운 청년들은 SNS를 매력적인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SNS 환경은 왜곡된 현실 인식을 낳기 쉽다. 여기에 온라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제 삼으려고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다함께가 뭐하는 단체인지 전혀 모르는 청년들도 급진화하며 이 운동에 새롭게 밀려들던 시기에 온라인 상의 공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심지어 당사자들에게는 역올한 모욕과 비난이 있어도 경솔하게 대응하기보다 충분히 숙고해 현명한 대응책을 찾아내야 한다. 사실 노동자연대가 온라인상에서

한때 광활한 ‘광장’으로 칭송받던 인터넷 공간은 이처럼 점차 개인주의적 정보 제공, 소모적 글쓰기로 이어진다. 이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나 거대 미디어 기업들, 그리고 대중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는 국가기관들의 필요와 맞물린 결과였다.

예초에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과 이윤 추구 기회를 무너뜨릴까 봐 전전긍긍했다. 반면, 1990년대에 인터넷을 접한 청년들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자본,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인터넷 공간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뜯어고쳤다. 지적재산권 강화, 적대적 인수합병, 규제 완화 등 낮은은 방법들이 사용됐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기업의 독점도 인터넷 사용 비용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새로운 주자들이 무대에 오르기는 했지만 말이다. 오히려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더 제한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돈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최근에는 방송도 인터넷 시장에 편입됐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인터넷 미디어들은 가장 효과적인 광고 기법을 찾게 됐다. 그 최근의 성과가 바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별화하는 SNS의 발전이었다.

초창기 페이스북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 세대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은 이제, 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도록 할 것인지들 두고 고민 중이다.”

미국의 광고 시장은 전 세계 인터넷 광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2012년 4백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 내 모든 인쇄매체 광고의 총액을 넘는 규모다. 2014년 그 규모는 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페이스북의 성장 비결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관련한 정돈된 정보, 즉 프로필을 구성한 점이다. 좁은 의미에서 프로필은 학력,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직장 이력 등을 나타내지만 모바일 시대의 프로필은 개인이나 사업자의 위치 정보와 행동 패턴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의도까지 포함한다. … 이는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게다가 SNS를 통한 광고는 지인들 사이의 추천과 권유를 통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므로 다른 인터넷 광고보다 효과가 크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각각의 이용자에게 딱 맞는 광고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이런 기업들과 국가기관들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 국가는 군사부문에 있어서 개발한 핵심 인터넷 기술들을 기업들에 제공하고 기업들은 광범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국가기관에 제공한다. 카카오톡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랍 혁명이 SNS 덕분이었고 과장하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빠르게 SNS 사용이 확산되는 중국 같은 곳에서도 ‘SNS 혁명’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인터넷과 SNS가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청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의 화면에 빠져 있는 동안 건너편에서는 기업주들과 국가기관들이 청년들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돼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인터넷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인터넷과 SNS가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청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의 화면에 빠져 있는 동안 건너편에서는 기업주들과 국가기관들이 청년들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돼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인터넷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려면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에서 배운다

차승일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아일랜드에서는 경제 위기 시기인 1987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3년에 한 번씩 모두 7차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와 중인 1995~2000년 아일랜드는 연평균 9.4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켈트 호랑이’라고 불렸다. 그 뒤로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2000~2008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9퍼센트를 기록했다. 물론 2000년대 후반 극심한 위기를 겪으며 2010년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한테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지만 말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든 정부·사용자·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논의구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발언권을 얻을 수 있고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고들 한다. 아일랜드노총(ICTU)은 사회적 합의 덕분에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과 사측 모두에게 가장 큰 성과는 서로 머리를 맞대며 상대방의 고민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안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사회적 합의의 기구 내 소통은 사실상 일방통행이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의 요구를 떠안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몇 가지 통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했다.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도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했지만 아일랜드는 더 급격히 악화했다. 게다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던 시기에 일어났다.(표1)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가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정치적 거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사회보장 지출 수준은 유럽에서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도 계속 삭감되고 있다. 연금 지출도 최저 수준이다.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연금을 다른 유럽 노동자들보다 더 늦게 받기 시작한다(유럽 평균 61세, 아일랜드 64.4세).



2006년 6월 14일 제 7차 사회연대협약을 맺은 아일랜드 노사정 대표들.



사진 출처: William Murphy (블리커)

“아일랜드 노총 : 우리는 형편없는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을 원한다” 2009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열린 긴축 반대 시위 참가자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좀 더 좁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노동조합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간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급감했다. 총고용이 6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와중에 말이다.(표2)

게다가 청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더 낮다. 20~24세 노

동자들의 조직률이 15퍼센트밖에 안 되고, 25~35세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26퍼센트밖에 안 된다. 또 이주노동자가 많이 늘어 아일랜드 전체 노동인구의 16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주노동자 조직률은 14퍼센트밖에 안 된다. 저조한 이주노동자 조직률은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호텔업이나 요식업에서 노동조합이 쇠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

또, 2001년에는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더 제약하는 내용으로 노사관계법이 개정됐다.

이미 1990년대 말이 되면 일부 노조에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97년 서비스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무명의 여성 노동자가 출마해 42퍼센

트를 득표했다. 당선하지는 못했지만 조합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기에는 충분했다. 이 선거 결과 데스 게라티와 잭 오커너를 중심으로 한 온건 좌파 성향이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게라티와 오커너 둘 다 신자유주의와 아일랜드 사회의 불평등을 규탄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합의 자체는 옹호했다.

서비스 제공 모델 VS 조직자 모델

아일랜드 서비스노조에 새 지도부가 등장하던 때 국제적 수준에서는 노동조합운동 모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비스 제공 모델 대 조직자 모델’ 논쟁이었다. 서비스 제공 모델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충을 법률적으로 처리해 주는 노무사 같은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직자 모델은 노동조합이 신규 조합원을 조직하는 데 중점을 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비스노조의 새 지도부는 조직자 모델을 채택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사회적 합의와 ‘기업별 노동조합운동’ 전통 때문에 아일랜드에서는 서비스 제공 모델이 특히나 더 안 좋은 형태로 정착돼 왔다. 사회적 합의는 개별 노조가 전국적 임금협상 타결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따내는 것을 금지했다. 사측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구조 개편’을 할 경우에 노동조합은 반대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대가로 생산

성 증대 조치들에도 합의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조합의 구실은 주로 조합원 고충 처리에 맞춰졌다. 대의원들은 개별 조합원들의 민원을 접수해 상급 교섭위원들한테 전달하고, 상급 교섭위원들은 그 민원을 노동법원 같은 데로 가져가는 식이다. 이런 서비스 제공 모델은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둘째, 아일랜드판 경총인 아이벡이 점점 사회적 합의를 내던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아일랜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호주 사례를 보며 걱정하게 됐다.

호주에서는 1983년부터 1996년까지 호주노총이 노동당 정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 사회적 합의 시기에 노동조합이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에서 발언권을 꽤나 얻은 듯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조장한 수동성 때문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계속 줄고 조합원 수도 1년에 2퍼센트 이상씩

계속 줄었다. 그러다가 1996년 보수당의 존 하워드가 집권했다. 우파의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대체”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해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섰다.

아일랜드에서도 ‘켈트 호랑이’ 호황이 끝나가자 아이벡이 점점 강경해지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노조의 잭 오커너 집행부가 기존의 서비스 제공 모델이 아니라 조직자 모델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서비스노동조합국제연맹 SEIU가 조직자 모델의 선구자다. SEIU는 1989년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을 벌이며 명성을 쌓았다. SEIU는 처음에는 미국노총 AFL-CIO 내에서 활동하다 2005년에 탈퇴했다.

SEIU는 조직 역량의 상당 부분을 신규 조합원 조직에 할애했다. 조합비의 30퍼센트를 할애해 학생 출신

활동가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조직팀을 꾸렸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가입시키는 데도 역점을 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SEIU 모델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용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문제였다.

예를 들어, 2003년 SEIU가 캘리포니아의 민간 요양병원 체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했다. 그 과정에서 SEIU는 사측과 협약을 하나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노조가 사용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겠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환자단체들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정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겠다. 사용자들의 배타적인 경영권을 인정하겠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 대가로 SEIU는 노동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표1.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1987년부터 사회적 합의 시작)

	유럽 15개국	아일랜드
1960~70년	—	77.9
1971~80년	74.5	75.9
1980~90년	71.8	71.2
1991~2000년	68.7	62.3
2001~07년	67.3	54.0

표2.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연도	조합원 수(명)	조직률(%)
1975	449,520	60
1985	485,050	61
1995	504,450	53
2004	534,300	36
2007	551,700	32

투쟁만이 사회적 합의가 부과하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아무튼 아일랜드 서비스노조는 노조 조직률 하락에 대처하는 해결책으로 SEIU의 조직자 모델을 채택해 신규 조합원 가입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노조 지도자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이 성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기층의 조직들이 탄탄해져서 사용자들에게 도전하고 협상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노동조합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부과하는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합의는 법률적으로 걸림돌 구실을 한다. 사회적 합의하에서 1990년 제정되고 2001년 개정된 노사관계법은 합법 파업의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해 파업을 벌이기 힘들게 했다.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법률적 제약을 넘어서기가 힘들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외국계 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서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결국 노사가 잘 협력해서 아일랜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므로, 해외자본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아주 취약하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외국계 기업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졌던 때는 커다란 파업이 일어났을 때였다. 1968년 제너럴일렉트릭 계열 공장에서 노동자 3백80명이 파업을 벌였고 그 뒤에 사측이 공격을 하면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서비스노조의 전신인 운수일반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전국적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에 놀란 정부가 사측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보조금 같은 것을 신청할 때 해당 작업장의 노동조합 인정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것을 뒤집는 데 15년이상이 걸렸다.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는 노동조합 기층 활동가 기반을 강화하는 데서도 장애물이 된다. 사실 조직자 모델이 성공하려면 기층 활동가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상층 조직자들이 신규 부문 조직에 전념하려면, 기층의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 등의 일을 잘 보완해서 기존 조합원의 탈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합의하에서 노동조합들이 전문화되

고 그래서 기층 활동가보다 상근자들의 수와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정부와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즉,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제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노조에서 집행부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 요약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사회적 합의는 본질상 계급 간 협력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이 사측에 휘둘리게 만든다. 둘째, 사회적 합의는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 상층의 복잡한 논의와 합의의 중요성을 격상시켜, 조합원들의 수동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셋째, 사회적 합의는 노동조합들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전체의 처지를 악화

시킨다. 넷째,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의 활동과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이 글은 전문통역가 천경록이 Kieran Allen, ‘Social Partnership and Union Revitalisation: The Irish Case’, *The Future of Union Organising*, Palgrave Macmillan, 2009를 한 워크숍에서 요약·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썼다.

독취 주수영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유가 급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2015년 초에도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유로존 경제가 지지부진하고, 손상된 금융 시스템을 부채가 짓누르고 있고, 중국과 그 외 ‘신흥 시장 경제들’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석유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석유 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그런데 1월 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6.42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1백10달러를 웃돌았다. 이런 변화의 원인과 결과는 모두 매우 불확실하다.

일부 원인들은 아주 분명하다. 미국의 ‘셰일 혁명’ 덕분에 석유 공급이 증가했다. 에너지 생산량 증대는 이른바 프래킹 공법, 즉 고압의 물을 분사해 암반층을 깨고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수압 파쇄 공법 덕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에너지 수요의 증가세가 완화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호황으로 중국에서 산업과 소비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해 석유와 가스, 그 밖의 원료 가격이 올랐었다.

그러나 호황의 원동력은 대규모 과잉투자였다. 그 과잉투자의 후유증이 점차 중국 경제에 부담이 돼, 중국의 천연자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훨씬 더 설명하기 힘든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구실이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석유 매장량의 25퍼센트와 세계 잉여생산능력[현재 산유국이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원유량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석유 생산 비용도 매우 낮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좌지우지하는 석유 카르텔인 석유

수출국기구 OPEC은 하루 석유 생산량 3천만 배럴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현재 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에 유리한 조처다. 그런 국가들이 균형 재정을 유지하려면 석유를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 하락에 대응하려고 [OPEC 회원국들에게]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강요했다.

5천9백10억 파운드가 넘는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 형편이 충분히 좋아서, 자국의 석유 매장량을 보존하는 대가 전술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미국의 수압 파쇄 공법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우디] 왕가가 유가 하락으로 중동에서 자신들의 주요 경쟁자인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타격을 입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동기

그러나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인 알리 알나미미는 여러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기가 경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 생산의] 효율성이 높은 산유국은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효율성이 형편없는 산유국은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하고 물었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표적은 석유 생산비가 높은 미국과 그 밖의 산유국들이다. 2005년 이후 높은 유가 덕분에, [석유] 기업들은 수압 파쇄 공법을 이용해서 또는 캐나다의 타르샌드[4~10퍼센트의 중질 타르의 원유가 섞인

모래나 바위, 오일샌드라고도 한다]나 아프리카 서부 해역이나 브라질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고비용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었다.

알나미미는 “효율성이 높은 산유국들이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는 유가를 강제로 떨어뜨려서 이 고비용 경쟁국들을 압박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기를 원한다.

유가 하락의 결과도 모호하다. 유가 하락은 지금까지 호황을 누리던 미국 에너지 부문에서 해고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제재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었다. 석유 수익 감소는 크리스마스 직전 러시아에서 심각한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데 일조했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석유 생산에 의존하는 나라들에 미치는 이런 부정적 효과가 에너지 비용 감소로 기업과 가계가 얻을 추가 소득에 의해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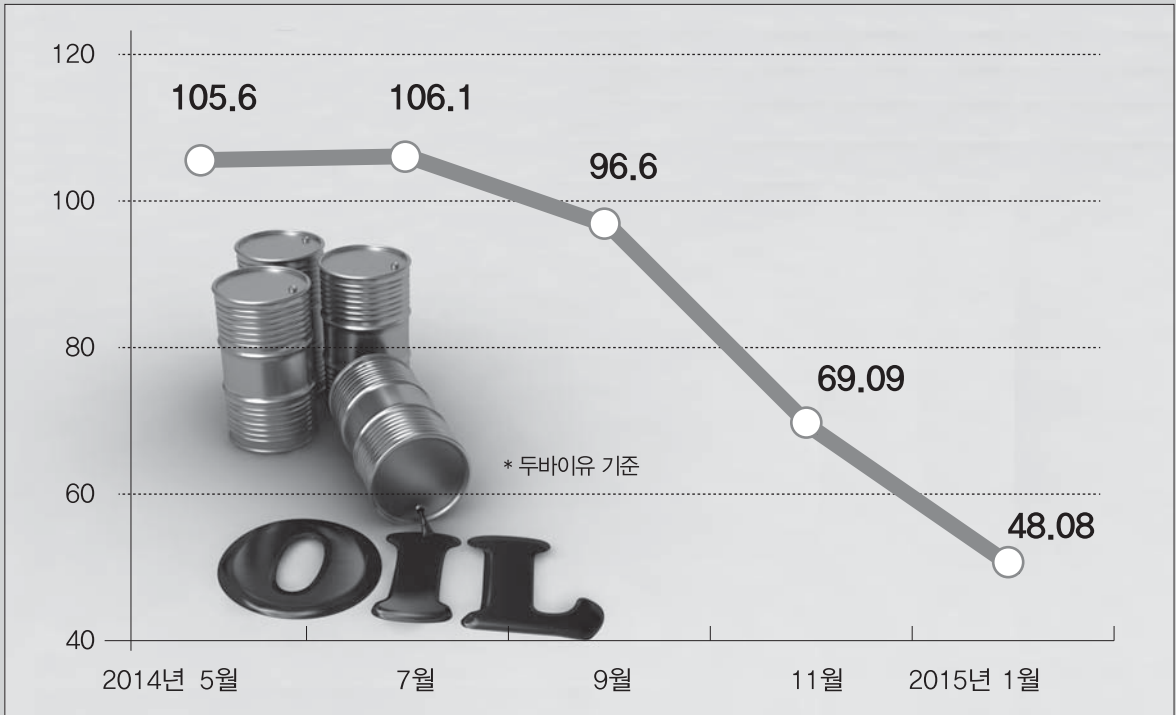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세계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유로존은 지금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유가 하락은 경제를 정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1990년대 초 이후 일본이 바로 그랬다). 유가가 급락하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확 바뀔 수 있다.

미국 경제의 비교적 빠른 성장(어느 정도 이것 자체는 지금 위협받고 있는 셰일 혁명의 결과였다)도 세계경제의 추진력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실질적 회복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35호 / 번역 이수현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김지윤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졸골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심산이고, 새정치연합도 미온적이다. 두 당은 오히려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적 없는 대학 정원 외 특례 입학 등을 합의해 놓고는 생색을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요구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4·16 재단,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의 요구는 이런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배·보상은 책임 규명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었다.

즉 특별법은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와 요구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요구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치유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책임 지도록 명시했다.

몰염치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정부의 책임은 거부하며 특별법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누더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진실 규명은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배·보상 관련 합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정한 지원소위원회가 있는데도 굳이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된 소위원회는 제대로 된 구실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합의조차 새누리당이 국가 책임 인정을 거부해 늦어졌고 이 때문에 조사위원회 활동 개시도 늦어졌다. 결국 이번에 통과를 합의한 지원 관련 합의안에는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모호하게 처리됐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보듬으려는 자세를 보이길 원했는데 결국 국민성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제 인양에 관한 논의도 진전이 없다. 가족대책위는 침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세월호 인양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실종자 수색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인양 운운하더니 막상 인양을 요구하자 비용 문제만 들먹이고 있다. 이대로 진실이 파문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래 놓고서 김무성은 “이제라도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줘서 다행”이라며 뻔뻔스러운 말을 늘어 놨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건너치며 유가족들을 눈물 흘리게 한 장본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 참으로 몰염치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오통호가 침몰하자 외교부 권한이라며 발뻘했다. 판피아, 적폐 척결 운운하더니 청와대에서 권력 다툼이나 벌이고 있었다.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정부가 한 것이라곤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뿐이었던 것이다.



조원오 기자

“잊지 않을게. 진실을 꼭 밝힐게” 박근혜 정부가 퍼부은 모욕과 냉대에도 진실을 포기할 수 없는 유가족들.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명할 리 만무하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삼성특검 특별검사로 활동하던 2008년에는 대표로 있던 로펌(하우림)이 삼성 계열사들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 온 로펌(텍스)과 합병해 특검보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으로 조사위원

회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는 지난 6월 MBC 이사회에서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정부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이 자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이기도 하다.

차기환은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극렬하게 반대해 왔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대리기사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석동현은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고, 황전원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특보로 활동한 자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돼야 진실을 덮는 데 확실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봤을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 전원 교체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기어이 여야 추천인사 10인을 특별조사위원으로 선출했다.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임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 참사의 책임자들은 국가 권력을 쥔 막강한 자들이다. 이윤 중심의 체제와 이를 수호하는 국가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은 매우 정당하다. 박근혜 퇴진 구호가 항의 집회에서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누더기 특별법대로 하면 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짧고(최대 21개월) 권한도 약하다. 누더기 진상조사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은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독립적 진상규명기구 건설’이라는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요구가 왜 중요했는지를 다시금 보여 준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실·책임 규명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모인 분노는 정부를 향했고, 일부는 체제에 분노했다. 일부 좌파들이 국가 청원형 운동이 문제였다

거나 특별법 제정 요구에만 갇혀 문제였다고 보는 것은 운동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물론 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의 태도는 문제였다. 온건파 리더들은 새정치연합의 눈치를 보고 의존하려 했다. 새정치연합이 뒤통수를 때릴수록 온건파 리더들은 조급해했고, 새정치연합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데도 온건파 리더들은 국회에서의 합의에 의존했다. 이런 태도는 운동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운동이 새정치연합에 의존할수록 환멸과 무력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 운동이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요구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책임자들을 소환·수사·기소할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게 유족과 운동이 요구한 특별법이다. 이것을 문제 삼는 주장은 아니기즘적 종파주의다.

한편, 유가족들의 원칙적 태도는 투쟁의 구심이 됐지만 요구를 쟁취할 강력한 힘이 부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완강히 버티는 상황에서 운동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확신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이런 구실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이윤 체제가 빚은 참사에 맞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힘을 사용해 싸웠다면 지배자들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큰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외면하면서 대중적 분노가 확대됐을 때(대략 7월 경), 민주노총 지도부가 파업을 호소했다면 사태가 달리 전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하루 파업조차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실종된 고리는 바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아직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진상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막가파이긴 하지만 막강하지는 않다. ‘청와대 실세’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철옹성이긴커녕 내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등 실수를 할 경우 기층 조합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 되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요구 목소리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옥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제한하더니 어처구니없게도 ‘특급호텔’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굴뚝 농성은 한 가닥 기대마저 짓밟힌 노동자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앞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판결을 2014년 최악의 판결로 뽑았다.

민변은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정리해고의 문을 사용자 측에 활짝 열어 준 판결”이라고 옹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공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을 쌍용차 노동자들의 몫으로만 맡겨 놔선 안 되는 이유다.

2015년 1월 13일 쌍용차는 신차 ‘티볼리’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간다. 최근 쌍용차 투쟁이 다시 부각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신차 생산에 따른 추가 인력 충원과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금 힘겹게 투쟁에 나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커지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 노엄 촘스키, 가야트리 스피박 등 세계적 석



“당신들이 올라간 그 굴뚝은 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 슬라보예 지젝의 연대 메시지.

학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지젝은 “당신들의 견결함과 끈질김은 우리 모두의 귀감입니다. 당신들이 올라간 그 굴뚝은 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는 연대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고공 농성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밖에 없다”는 연대의 호소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측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사측은 “공장 내 다른 근로자를 향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거나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며 고공 농성을 불편해 하고 있다.

쌍용차가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며 들먹이는 ‘경영 정상화’ 때문에 공장

내 노동자들도 고통받고 있다. 쌍용차 판매량은 2009년 3만 4천7백3대에서 2014년 14만3천5백16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5배 넘게 증가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동종 업종 노동자들에 견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연대

그러나 쌍용차 기업노조는 2009년 금속노조 탈퇴 후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지난 5년간 ‘부분규 타결’로 회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합의안 찬성률은 매년 떨어져 간신히 50퍼센트를 넘기

는 수준이다. 그만큼 공장 내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노조는 고공 농성에 대해서도 ‘농성 해제 후 대화’라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굴뚝 농성이 ‘공멸’을 자초한다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조건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커지게 할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파 활동가들이 올 하반기 노조 선거에 도전해 선전한다면, 공장 내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월 24일(토)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

폐! 쌍용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민주노총 선거 결과에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드러났다. 이 열망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구실이 중요하다.

유병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범국민대회**
일시 : 1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도심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1월 7일 현대중공업노조의 잠정 합의가 부결됐다. 투표자의 66.5퍼센트인 약 1만 명이 반대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산재 예방·처리를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 인상에 반대했다. 특히 최저 시급 수준의 열악한 기본급에 시달려 온 청년 노동자들의 반발이 컸다.

“겨우 이거 얻으려고 그동안 싸웠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부결입니다.”

또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강화하고 임금을 하락시키는 성과 연봉제를 철폐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도 ‘그간 친사측 노조가 해 온 공문구 합의와 무엇이 다른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 활력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다수 모여 있는 ‘현장실천단’은 투표 전



전투적 노동자들이 현장의 열망을 수용해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날부터 부결을 주장했다.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런 반대 여론과 활동 때문에 매우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지금까지 벌인 네 차례 부분 파업은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노동

자들은 그 안에서 자신감을 얻고 조직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조선업 위기 속에서 사측의 양보를 강제하려면 투쟁수위를 더 높여야 했다. 부분 파업을 벌여도 많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사측의 타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노동자들도 새해에는 더 강력하게 싸우길 바랐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계속 주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고했던 2시간 파업 계획을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유보한 바 있다. 이후에도 사측이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노조 지도부는 부분 파업을 더 띄엄띄엄 했다. 그러다 기대에 못 미치는 잠정 합의를 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점에서 실망감을 느꼈다.

이것은 민주파 노조 지도부도 사측과 현장조합원 사이를 중재하며 투쟁보다는 협상을 중시하는 노조 관료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라도 노조 지도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망을 수용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추가적인 파업은 어렵다’는 노조 관계자의 말이 실린 것은 우려스럽다.

그래서 ‘현장실천단’이나 현장의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더 강력하게 싸우고 주장해야 한다. 다가올 대의원 선거에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대거 진출해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현장실천단’이 말했듯이, “쟁대위[노조 지도부]가 현장 여론에 부응하지 못할 때… 조합원들의 편에서 쟁대위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김지태



그리스가 저항한다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중단을 약속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시리자의 집권은 큰 전진이겠지만 누가 이기든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1월 5일 경찰이 한 노동자 집단을 공격했다. 그리스 선거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보여 준 사건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아테네 인근 재활용품 처리 시설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임금 체불에 항의해 일손을 놓고 점거에 들어갔다. 경찰은 파업 지지 대열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33명을 연행했다. 그중에는 반자본주의 좌파연합체 안타르시아의 아테네 시의원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자비에드 아슬람도 있었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9일 안토니스 사마라스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붕괴했을 때 아테네 국회의사당 밖에서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행진하고 축하했던 노동자들이다.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 공영 방송국 ERT의 언론 노동자들, 학교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했다. 사마라스가 해고한 이 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해 투쟁해 왔다.

정부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사람들은 열썬안고, 광장 주변을 행진했다. 그리스 전역이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다.

1월 25일 총선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승리할 것 같다. 시리자는 은행가들의 위기에서 비롯한 그리스의 부채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정부는 겁주기 캠페인으로 반격했고, 언론이 장단을 맞췄다. 이들은 시리자가 승리하면 경제적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떠든다.

부채

또, 그들은 시리자가 승리하면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빚은 은행가들 때문에 급증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채권자다. 중도 유권자들을 겁주 시리자에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거대한 좌경화 흐름 때문에 이 계획은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심지어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조차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마주하는 장애물은 겁주기 캠페인 말고도 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민간 투기자본도 그리스를 협박한다.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인] 캐피탈그룹은 런던 금융가에서 시리자와 만나 그리스 4대 은행의 하나인 유로뱅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진: 노동자 그리스 연대

“우리가 이긴 것은 전투이지 전쟁이 아니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그리스 정부가 무너지던 날, 의회 바깥 노동자들.

대통령 선출 기간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우익 정당인 독립그리스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정부 측의] 매표(買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제시한 증거를 진지하게 채택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장차 등장할] 좌파 정부가 국가 기구 안에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를 얼핏 보여 준 사건이다.

지난주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안타르시아를 포함한 다른 좌파 정당들에 지지를 요청했다. 시리자가 유럽연합 탈퇴파와 공조하려 하자 정부는 시리자가 극단적이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모두 겁주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물론, 안타르시아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단체[사회주의노동자당 SEK]는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는 시리자와 한편에 설 것이다.

그러나 안타르시아와 시리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시리자는 유럽연합 탈퇴를 원하지 않고, 부채 취소보다는 재협상을 원한다. 시리자는 그리스 민중의 민주적 의지를 존중하려고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에 말한다. 시리자가 부채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은 민주주의를 경멸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 줬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 같은 자들은 결코 순수히 그리스 은행들에 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시리자가 그들을 달래는 식으로 접근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반자본주의 좌파는 왼쪽에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

시리자 지도부의 선거 운동 계획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 시리자 지도부는 2013년까지 정부에 참여했던 민주좌파당의 당원 같은 친우파적인 후보들까지 지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리자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다. 한동안 시리자는 계속 우경화했지만, 선거 기간에는 그러기가 어려울 것이다.

타협

치프라스는 은행가들과 어떻게 타협할지를 말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안다. 그래서 그는 한편에선 은행가들을 달래고 다른 한편에선 대중에게 호소하는 식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시리자 정부가 실질적 개혁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개혁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국회의사당 밖에서 행진하던 노동자들은 복직을 기대한다. 이 문제는 노동자와 새 정부가 맞붙게 될 첫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이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에 대한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시리자 정부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은 이주민 자녀를 공격하는 사마라스의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 왔다. 그들은 그리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에게 그리스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모든 투쟁들 덕에 시리자는 여론 조사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 이 투쟁들은 또한 사람들이 시리자 정부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 준다. 안타르시아는 선거 운동을 통해 이런 좌경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후보로 내세웠다. [또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후보를 세워 우

파의 인종차별적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선거 운동 속에서 황금새벽당에 대한 재판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부채 문제에서 유럽중앙은행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과 단절하고 부채를 탕감시켜야 한다고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정부의 겁주기 캠페

인에 반격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이번 선거 운동은 미래를 대비하는 초석이기도 하다. 시리자가 집권하더라도 우리는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투쟁해 온 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35호 / 번역 최병현

사회 상층부의 상시적 위기

긴축 정책 추진 압력과 저항 사이에 끼여 정부가 세 차례 무너졌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 32번의 총파업을 포함해 수많은 투쟁이 있었다.

혹독한 삭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 기업인들은 삭감을 열렬히 지지했다. 차기 정부도 전임 정부들을 붕괴시킨 압력에 똑같이 직면할 것이다. 독일 정부는 포기하

지 않고 그리스에 긴축 정책을 펼치시켰다고 분명히 밝혔다. 긴축 정책을 완화하느니 차라리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킬 방법은 은행가들이 만든 위기의 대가를 치르길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파시스트에 맞선 투쟁

나치인 황금새벽당에 맞선 반파시즘 대중 운동이 성장해 왔다. 정부는 파업과 시위에 압력받아 어쩔 수 없이 황금새벽당의 폭력에 대응해야 했다.

황금새벽당 지도부는 이주민들과 좌파들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계획·교사·실행한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국가는 파시스트의 적이 아니다.

2012년 선거에서 약 50퍼센트의 경찰관이 황금새벽당에 투표했다. 그리스 지배자들은 위기가 계속 심화되면 노동자들을 진압하는데 파시스트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차 등장할 시리자 정부에 경제 문제와 함께 황금새벽당 재판 진행 문제도 주요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파시스트의 부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노동자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